



KACUNS Capstone Papers 2021-1

한국의 유엔가입 30주년 학술회의 기조연설

(2021.10.22 제주평화연구원)

오준 전 유엔대사

<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>

- 2013-16년 유엔대사직을 포함해서 유엔대표부에 총 4차례 근무
- 유엔은 2차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72년 전 만들어진 국제기구. 유엔은 1945년에 창설되었지만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음.
- 우리나라가 유엔에 늦게 가입한 것은 물론 남북 분단이 원인. 북한은 통일이 된 후 남북한이 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,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유엔가입을 더 이상 막지 않게 되자 91년 9월 남북한이 같은 날 유엔 회원국이 되었음.
-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큰 변화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맞아떨어진 결과: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,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,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-> 그렇게 해서 1990년 한.러 수교가 가능했고 한.중 수교도 논의되는 가운데,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기 어렵게 되었음.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교를 하면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게 되는데, 미.일의 북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대북 설득이 가능했을 것으로 봄.
-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은 한반도 평화.안보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: 유엔 가입 자체가 북한의 개방과 변화에 기여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, 유엔이 각종 현안 문제를 다루는데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때



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과 압박이 동시에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음. 2006년 이후 핵문제로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나, 2003년 이후 유엔의 연례적 북한인권 문제 토의에서 볼 수 있듯이, 북한과 같은 폐쇄적 국가에도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압박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평가

<우리의 유엔 외교>

- 유엔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그간의 가입 지연을 만회하려는 것처럼 열심히 활동: 안보리 이사국 두 차례, 유엔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, 경사리 의장 배출 (우리의 열의도 있었지만,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하자마자 유엔에 가입한 데 반하여 우리는 정부 수립 후 43년이 지난 후 '준비된 회원국'으로 유엔에 가입한 덕분)
- 유엔 가입 후 30년간 유엔 내에서 존재감을 높이는데 성공했지만, 이제는 질적인 성장과 기여 확대, 즉 유엔외교위 내실을 추구할 때: 그러려면 우리가 국가로서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. 예를 들어서, 우리가 유엔에서 '인권'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면, 그것이 정권이 교체되면 수정될 수 있는 단기적 외교 정책이 아닌 장기적 국가 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함.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.

<유엔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기여>

- 끝으로, 우리는 유엔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성장해 온 국가이자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하는 중견국가로서,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: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분쟁, 대유행병,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점증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적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
- 흔히 유엔이 잘 하고 있는 일들(수많은 분쟁 예방, 인도적 지원, 인권 보호 등) 보다 못하고 있는 것들(시리아, 미얀마 등)에 주목하기 쉬운데, 사실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은 상당 수준의 글로벌 거버넌스를



- 제공 *함마술드 사무총장(1954): 유엔은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
- 오랫동안 유엔과 관련된 일, 소위 다자외교를 다루어 오면서,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: 유엔이 과연 세계정부로 발전할 수 있을까? 결론부터 말하면, 쉽지는 않지만 될 수 있다고 봄.
 -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, 가장 어려운 난관은 현대 국제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생각: 지난 수백 년간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인구나 국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음.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칙은 상당히 인위적. 국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인데, 왜 국가는 모두 동일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걸까? 유럽에서 처음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이 생겼을 때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들도 큰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, 이를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다루어서는 국제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.
 -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문제: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간이 아닌 국가들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서로 맞지 않음. 인구가 많은 국가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작은 권한 행사
 -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권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하였던 국제연맹은 결국 강대국들의 불참과 외면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음. 그러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유엔은 강대국(전승국)들의 이해, 즉 국제적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으나, 이런 현실 반영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에 집중 ->안보리만이 모든 회원국을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,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라는 특권 보유
 - 이에 따라 유엔은 강대국의 참여를 확보하였고, 지난 76년간 국제 평화 유지의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,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한계 노정: 그러한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"현실"을 안보리라는 한 기관에만 집중해서 지나치게 반영.
 - 세계화가 빠른 속도속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인류가 처한 도전과 문제들은 평화와 안보에만 있는 것이 아님.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강대국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해 놓아서 중요한 국제 분쟁에 거

부권 사용으로 유엔의 행동이 제약되는 일이 흔하고, 경제, 사회, 환경, 인권 문제들에 있어서는 유엔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행동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아짐. 경제 분야에서 G20같은 유엔 외부의 비공식 협의체가 생겨난 것도 유엔 제도권 내에 경제 대국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음. 이렇게 보면, 유엔 전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안보리에서의 "현실 반영"은 완화시키고, 유엔 내 다른 기관에서의 "현실 반영"은 강화시킬 필요.

- 유엔이 세계정부처럼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오늘날처럼 주권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너무 이상적인 목표로 들릴지 모름. 궁극적으로는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인구나 국력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찾을 수 있을지에 귀결될 것 -> 여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예가 미국의 연방제도나 EU의 의사결정방식. 미국은 50개 주의 개별적인 자치권을 인정해서 연방 상원은 각 주의 인구나 면적에 무관하게 똑같이 2명씩 선출한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 한편, 대통령과 하원은 인구에 기초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, 즉 인구가 많은 주는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 행사. EU도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하지만, 이사회는 회원국 55%, 전체 인구의 65% 찬성이라는 이중다수결 제도를 적용하며, 유럽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의석 할당. 즉, 주권 평등의 원칙이 인구와 국력이라는 현실과 타협.
-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이처럼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과 국제사회의 현실 간의 타협점을 찾는 지혜 필요. 이러한 과정에서 국력이나 인구에 있어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주권 평등이 더 존중되기를 바랄 것이고, 그 반대의 경우는 현실의 반영을 더 중시할 것. 세계 26위의 인구(남북통일시 18위)와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발전되어 인류가 직면한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. 우리의 국익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동 발전에 있기 때문.